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전문공보관 김형주
전화 051-780-4243

보도자료

2023. 1. 31.(화)

제 목

43억 원 쪼개기 불법대출 대가로 금품수수한 은행지점장 및 대출 브로커 구속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동일인에 대한 분할 여신(일명 ‘쪼개기 대출’) 등의 방법으로 11개 법인에 합계 43억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6,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甲은행 지점장과 지점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대출자를 소개한 대출 알선자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대출을 실행받은 법인 실사주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였음
- 법인 실사주들은 甲은행에 부실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자금 대출이 불가능하자 타인 명의로 새 법인을 급조하여 여러 법인으로 나누어 대출을 신청하고, 지점장은 알선자, 대출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며 부실대출을 실행하였음
- 여신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을 결정하여야 할 지점장이 오히려 대출자와 유착되어 본부 심사 없이 지점장 전결로 고액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출자들에게 다수 차명 법인을 동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명의상 대표로 내세울 사람의 신용도를 조회해주거나 법인 상호, 업태 결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하였음

- 1개 법인당 지점장 전결 대출한도가 제한되고, 동일인이 대표자인 경우 별개 법인이더라도 관계기업으로 묶여 대출한도가 제한되므로 본부 심사 없이 전결 범위를 초과하는 자금을 대출할 목적으로 지점장과 대출자들이 협의하여 다수의 차명 법인을 이용해 대출 신청하고, 지점장은 관계기업 등록을 고의로 누락해 전결로 대출을 일으키는 구조임
- 위와 같은 대출 과정에서 지점장이 알선자, 대출자로부터 대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법인 주식, 고가 골프채를 제공받고, 인건비를 가장하여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고액 부실대출의 이면에 부당한 금품거래가 존재하였음
- 검찰 수사를 통해 지역 대표 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대출비리의 실체와 지점장과 대출자들 사이에 부정한 금품이 오고간 유착관계를 규명하여 엄정히 대응하였음

I 피고인

피고인	직업	역할	비고
A○○ (55세)	甲은행 前 지점장	대출 실행, 금품 수수	구속 기소
B○○ (45세)	분양대행업 (乙법인 운영)	대출 실차주, 알선, 금품 제공	구속 기소
C○○ (52세)	분양대행업 (丙법인 대표)	대출 실차주, 금품 제공	불구속 기소
D○○ (49세)	건설업 (丁법인 운영)	대출 실차주	불구속 기소
E○○ (64세)	축산업 등 (戊법인 운영)	대출 실차주	불구속 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가 위반한 은행 여신심사 규정

- ▲ 대출이 불가능한 법인을 대신해 신규 법인 설립하여 대출 실행
- ▲ 지점장 전결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 법인 설립 후 동일인이 운영하는 법인임에도 관계기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분할 여신으로 취급
- ▲ 주주명부,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 실행
- ▲ 실사주가 부실채무자인 법인에 대출 실행
- ▲ 신규 거래 법인임에도 사업장 존부 및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전 공모에 따라 대출 실행 등

(1) 피고인 A○○·B○○·C○○

- '21. 5.~9.경 B○○로부터 C○○를 소개받고, 지점장 전결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대출 목적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할여신을 취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신규정을 위반하여 C○○가 운영하는 丙법인 등 3개 법인에 합계 16억 원의 대출을 실행

(2) 피고인 A○○·B○○·D○○

- '21. 7.~9.경 B○○로부터 D○○를 소개받고, D○○가 운영하는 丁법인으로 대출이 되지 않자 지점장 전결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대출 목적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할여신을 취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신규정을 위반하여 D○○가 운영하는 3개 법인에 합계 10억 원의 대출을 실행

(3) 피고인 A○○·B○○

- '21. 4.경 B○○가 운영하는 乙법인에 대해 지점장 전결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는 업태를 정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용불량 상태의 실사주인 B○○에 대한 신용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여신규정을 위반하여 전액 신용으로 乙법인에 5억 원의 대출을 실행

(4) 피고인 A○○·E○○

- '21. 3.~9. 甲은행에 13억 원 이상의 기존 부실채무가 있는 E○○가 차명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동일인이 운영하는 법인 임에도 분할여신을 취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신규정을 위반하여 E○○가 운영하는 戊법인 등 4개 법인에 합계 12억 원의 대출을 실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증재등)

- A○○는 '21. 2.~'22. 2.경 B○○이 알선하거나 직접 실행받은 대출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8회에 걸쳐 2,900만 원 수수하고, B○○는 공여
- A○○는 '21. 5.~'22. 8.경 C○○에 대한 대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500만 원 상당 주식, 200만 원 상당 골프채, 12회에 걸쳐 2,9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 상당 금품 수수하고, B○○, C○○는 공여



사건 진행경과

- 甲은행은 자체 감사 중 A○○가 실행한 다수 대출이 내부 여신규정에 위반됨을 발견하고, 지점장 A○○와 대출자 E○○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음('22. 5.)
- 계좌추적을 통해 A○○가 대출이 실행된 법인으로부터 자녀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하고, 대출받은 법인의 등기상 소재지가 주거용 빌라이거나 나대지로 파악되는 등 전체적인 혐의를 파악하여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음

※ B○○, C○○, D○○ 및 A○○의 금품 수수 혐의는 수사 경과에 따라 추가 입건함

- 압수수색 결과, A○○가 지점장 전결 한도에 맞추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출 신청자들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대출 목적의 법인 설립 단계부터 가담하며 범행을 공모한 사실, 그와 관련하여 B○○, C○○로부터 허위 인건비를 가장해 5,8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금원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신규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과 고가의 골프채까지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졌음
- 또한, A○○를 비롯한 공범들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말을 맞추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허위 자료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검찰 출석조사 내용을 녹음하여 공유하는 등 수사에 함께 대비한 사실도 확인하였음
- 부정하게 이루어진 대출의 규모가 상당하고, 은행 지점장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제공·수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점장 A○○ 및 다수 대출에 대출에 가담하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B○○를 구속 기소하고, 대출자 C○○, D○○, E○○는 불구속 기소하였음(23. 1. 31.)

IV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 부산지역 대표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대출비리에 엄정히 대응함
 - 대출자들이 지점장 전결로 손쉽게 대출받을 목적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차명 법인을 동원하고, 형식상 대표로 내세울 법인 대표자를 미리 A○○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등 지점장과 대출자들이 서로 유착되어 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함
 - 대출자들은 A○○을 통해 甲은행의 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이용함으로써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전체 대출 규모가 43억 원에 달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출비리는 은행의 부실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함

- 압수수색·계좌추적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점장 A○○을 비롯해 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한 대출자들의 혐의를 밝혀 함께 기소함으로써 부산지역 대표 은행에서 발생한 대출비리에 엄정히 대응하였음

● **사건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금융 부패범죄를 철저히 규명함**

-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청렴의무가 부과되고, 그 직무관련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뇌물죄에 상응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음
- 계좌추적 결과 발견된 부정한 금품의 단서를 바탕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주요 증거를 다수 확보함으로써 대규모 대출비리 이면에 고액의 금품 제공·수수가 존재한 사실까지 철저히 규명함

● **향후 계획**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